

환경부 보도자료

- ☐ 2004. 3. 배포
- ☐ 사진 없음
- ☐ 총 75 쪽

'04년 3월 24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백규석 과 장	전화	02-2110-6605
기획예산(담)	김법정 서기관	(메일)	bj123@me.go.kr

환경부, 2004년 연두업무보고(3. 23, 정부중앙청사)

- ◇ 제품의 환경성보장제 도입,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계획」 수립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60일이상)
- ◇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등을 담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 (10개년)」 수립, 사업장 총량관리 시범사업 실시
-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에너지상대 가격체계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부방침 확정
 -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 전환 방안(경유차→경유) 추진
 -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 수도권 보급,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 배출허용기준 강화('04. 7)
- ◇ 수질총량제 시행원년을 맞아 대구·부산 오염총량제 시행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시행('04, 라면봉지 등 필름류, 형광등), 고품질 재생골재 인증제 시행 및 공공기관의 사용의무화
- ◇ 「국가생물자원 보전 마스터플랜」을 수립('04.12), 생물자원보전 로드맵 작성, 한국고유종 조사·발굴 등 역점 추진
 -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확대(지리산, 6마리)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강화

- **곽결호(郭決鎬) 환경부장관**은 3. 23일 오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께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1)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2)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3)환경-경제 상생의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4)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등 **4대 중점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야 1.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 과민증 등 신종 환경성질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도서관·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개선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 금년 5월경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04~'08)」을 수립,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신축 공동주택의 주민 입주전 실내공기질 측정·공고(60일이상)를 실시하고, 유해건축자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기전자제품 등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및 재활용률을 평가하는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를 시행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계획('04~'13)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03.12)」 후속조치를 통해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 이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저공해차량 보급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기본계획('05~'14)」을 수립하고, 사업장 총량관리 시범 사업 실시, 수도권대기관리대책 추진기구 설립도 역점추진할 것이다.
-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정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적인 초저황경유(황함량 430→30ppm)를 수도권에 우선 시범보급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금년말까지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4,312→7,400대)하며, 중·대형 경유버스 및 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도 '04.7월부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금년말까지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차령 12년→7년이상, 34만대→133만대)

□ 2004년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원년(元年)'으로 삼아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水) 생태계 회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년 6월 한강(漢江)수계 경안천 유역(廣州市)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첫 시행하고, 관련법을 개정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편,
- 금년 8월에는 광역시 최초로 낙동강(洛東江)수계 부산·대구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금강(錦江)·영산강(榮山江)수계도 '05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목표수질 고시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선진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시행 2년째를 맞아 ‘순환형 폐자원 관리체제 정착’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금년중 라면봉지 등 필름류와 형광등을 신규 품목으로 확대하고 가전(30→38%), PET(63→73%) 등의 재활용목표율을 대폭 제고하며,
- 다량발생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재생골재 생산 및 사용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32개 지역) 및 중장기 포장폐기물 감량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 2.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국토 난개발과 개발용지 수요를 친환경적으로 해결,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이 눈길을 끈다.

-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적 환경평가로 발전, 계획 입안 단계부터 대안(代案)을 강구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03 :수도권완료, '04 : 충청·강원, '05 : 영호남)을 비롯하여 환경친화적계획기법 Guideline 제시, 국토 환경용량 산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국토를 先환경계획-後개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내실화와 사업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가서 대행계약의 분리발주, 평가항목 사전확정제도(Scoping)를 시행하고 평가서의 조건부 협의를 활성화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한반도 3대 생태축이자 자연생태계 보고인 **백두대간, 비무장 지대, 각종 도서·연안**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백두대간**을 핵심·완충지역으로 구분, 지정기준과 보전원칙을 제시하고 훼손유형별 복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DMZ 자연환경보전종합대책**」과 「**도서·연안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 자연경관 보전계획(10개년)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자연경관보호구역**(특별보호/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생태계보전지역도 핵심, 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자연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연생태공원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해 나갈 것이다.

□ **국가생물자원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국립생물자원관**」 공사에 착공하여 국가생물자원 보전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국가생물자원 보전 마스터플랜**」을 수립('04.12)하여 생물자원 보전 로드맵 작성 및 생물자원 조사연구, 환경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년중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에** 추가방사하는 등 생물종 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생태계 위해외래종의 **위해등급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한편 대형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 대책도 제시하였다.

-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개발계획의 사전검토·조정장치**를 마련하고,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 **그린벨트의 녹지총량관리** 방안 강구와 팔당호 수질보전 및 자연보전 권역 관리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 3. 환경-경제 상생의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 환경부는 어려운 경제도 살리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도 향상시키기 위해 「2단계 Eco-2 프로젝트」를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0년 환경기술 선진국을 목표로 자동차청정기술, 수처리 선진화 등 2개 중점분야 ECO-STA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우선사용 등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 「환경산업 중장기 발전전략('04~'10)」을 수립하여 국가별 특화된 해외진출전략을 추진하고,
 - 중국 환경시장 특수(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 선점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등 8개 협력사업을 가시화하고 민·관 합동 환경산업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학과 졸업생 대상 산·학·연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환경기술인력센터」설치와 유망 환경벤처 기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환경을 '비용요소'가 아닌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기업경영·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에도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금융가이드라인」 제정 등 친환경 경영기법을 개발·보급하고, 환경-경제 통합계정 구축을 위한 녹색 GDP 2단계사업('04~'07)에 착수하는 한편,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녹색소비 문화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분야 4.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 「수돗물불균형해소 중장기종합대책('05~'14)」을 수립하여 농어촌, 섬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망을 집중 확충하여 '07년까지 상수도보급률을 2배(농어촌 31→60%, 섬 30→80%)로 제고할 계획이다.
-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약 43%가 무단방치, 소각되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收去補償費)를 현실화(kg당 100원이상)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적체된 폐비닐(25만톤)을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축산분뇨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환경부·농림부 합동 TF)을 중심으로 고농도 축산분뇨(농어촌 오염부하의 26%) 자원화를 추진하고,
 - 농촌오수처리시설 지원, 고랭지채소밭 토사유출방지대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 자율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지자체를 그린시티(Green City)로 지정·지원하고, 지방의제21 주민실천운동(Local Action 21) 활성화와 전국 16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역환경연구 중심기지(Hub)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그 밖에 오는 3.29~3.31 제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초의 「UN 세계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등을 세계에 알려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업무혁신 방향

- 특히, 환경부는 2004년을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로 삼아 상시혁신체계 구축과 고객지향의 환경서비스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 내부적으로는 신 행정수요에 부응한 핵심기능 중심의 조직재편, 업무혁신-성과 위주의 통합인사, e-업무프로세스 혁신, 자발적 혁신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 대외적으로는 국민과의 대화·참여, 그리고 고객중심 환경서비스 발굴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이날 보고를 마치며, 환경부는 장관이하 전직원이 지난 200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정부업무평가 최우수부처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붙임 :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2004년도 연두업무보고
상 세 보 고 서

21世紀 生命共同體 時代를 여는
2004年度 主要業務 推進計劃

2004. 3. 23

環 境 部

(www.me.go.kr)

I.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	1
----------------------------	---

II.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	----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1
2.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15
3. 생명의 강을 살리는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18
4. 순환형 폐자원 관리체제 정착	20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5. 백두대간 등 한반도 3대 생태축의 체계적 보전	23
6.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사전평가체계 강화	26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7. 21세기 핵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28
8.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	31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관리역량 제고	33
10.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2배로 제고	35
11. 농어촌 생활환경의 가시적 개선	37

주요 현안과제

12. 대형개발사업과 토지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대책	39
13. 봄철 황사피해 저감대책 수립·추진	43
14. 아시아 최초 「UN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	48

III. 2004년도 업무혁신 목표 및 추진계획	50
----------------------------------	----

I.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

1.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	2
2. 주요 업무혁신 성과	5
3. 환경정책 혁신 성공사례 분석	6
4. 종합평가 및 향후 보완과제	9

I. 지난 1년간의 환경정책 추진성과

1.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

가. 사전예방(事前豫防) 중심으로 환경정책 선진화·효율화

- ☐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등과 함께 총 100여회에 이르는 토론회와 타협, 이견 조정을 거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03.12)
- 종전의 농도규제(濃度規制) 중심에서 총량관리(總量管理) 체계로 대기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 10년내 대기질 선진화
- ☐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책임주의에 의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03.1)
- ☐ 국토 난개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하고('03.12, 수도권 완료), 「야생동식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보전 기틀 확립
- ☐ 국내 최초의 「비점(非點)오염원 관리종합계획('04~'20)」을 수립하고, 낙동강 등 3대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등 '04년 수질 총량관리제(總量管理制)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나.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Eco-2 프로젝트 2003」 추진

-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집중 지원('03, 750억원)하고, 환경신기술 우선사용제도, 성공불제 시범사업 등 기술 실용화 촉진
- ※ 정부 R&D 평가에서 투자확대대상인 최우수(A등급) 평가('03.8 국과위)

- '한·중 환경산업센터'를 거점으로 년 15%씩 성장하는 중국 환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협력단 파견(9회), 대아시아 환경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산업 대외협력 내실화
- 「물절약 종합대책('00.3)」에 따라 목욕장 등 물다량이용업소의 절수기 보급('03년말 99%), 노후수도관 개량 등을 추진, '99년 이후 총 5억 8,900만톤(년간 수돗물생산량의 10.3%)의 수돗물 절약
-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03~'07)」을 수립하고, 환경학과 졸업생 취업 촉진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152개 기업 참여)

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환경정책 혁신

- 주민이 환경보전 주체로 참여하는 녹색 지역공동체 구축
 - 4대강 특별법 후속조치로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유역자치(流域自治) 개념의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상수원 보호와 규제지역 주민편익을 함께 고려한 Win-win 전략
 - 「지방의제 21」을 지역주민실천운동(Local Action 21)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실천모델(10개) 선정·확산
- 환경외교를 다변화, 내실화하여 아시아 환경선도국의 위상 강화
 - 중국 및 동남아 지식전파사업(년간 47만불), 황사방지 GEF사업('03.1~'04.6, 100만불) 등 동북아 협력사업 내실화
 - 아시아 최초로 UN 세계환경장관회의(UNEP 특별집행이사회/지구환경장관포럼)를 유치, 성공적 개최 지원
 - 기후변화협약 제9차당사국총회 등에 적극 참가하고, 국내 우수 환경정책 홍보(Korea Environmental Policy Bulletin/종량제, 4대강특별법)

라. 연두업무보고 및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1) '03 업무보고 추진현황 : 8건(완료 4건, 추진중 4건)

번호	보고내용	2003 목표	목표대비 실적	평가결과
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연내 법제정 완료	-법 제정 완료('03.12)	완료
2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	-갈등의 합리적 중재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03.12) 등	완료
3	4대강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총량관리제 성공적인 정착 준비	-낙동강 목표수질 설정('03.9),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03.12) 등	완료
4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조기 정착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전국 시행	완료
5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에 따른 대책	-경유차량 확대에 대비, 대기오염저감대책 마련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등 정부방침 확정('03.5), 연구용역중	추진중
6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 관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및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수도권평가지도 제작 및 전략환경평가 연구용역 완료('03.12)	추진중
7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소각시설 및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각시설 환경조사, 화학사고대응 정보 시스템 확대 등	추진중
8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환경기술 R&D 확대(700→750억원) 등	추진중

(2)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16건(완료 9건, 추진중 7건)

☐ 완료 : 9건

- 수도권특별법 제정, 백두대간 훼손실태 및 보전대책 영상보고, 댐건설 관련 물관리개선방안 보고 등

☐ 추진중 : 7건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정책별 고객관리개념 도입 등

2. 주요 업무혁신 성과

□ 혁신시스템 정비 및 전직원 혁신마인드 확산

- 변화를 선도하고 혁신사례를 공유·학습하기 위해 「업무혁신팀」 및 「인터넷 업무혁신방」 구성·운영('03.5)

※ '04.2월 현재 총 62건의 혁신사례 등재. 1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중앙부처 중 1位)

- 난상토론식 직급별 연찬회 개최(10회),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추진

□ 환경정보화 및 국민참여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소리기능, 노약자 돋보기기능, 어린이환경교실 등), 정책고객 D/B 확대(52,000명), 수질·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11개도시) 등 Eco-Digital화(化) 추진

※ 정보화(情報化)수준 평가 3位, 부처 홈페이지(Homepage) 평가 5位

- 정부 최초의 '시민명예환경감사관(10명)' 도입, 주부환경모니터요원 활동(904명), 민·관 합동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유차환경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국민만족도 평가(민원행정서비스, 주요정책) 2位

□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 행정 효율화

-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인사·조직관리 투명화·효율화

- 인사교류(환경부↔건교부 2명, 민간기업 2명), 다면평가 전면확대(5급 이상), 총 정원내의 T/F 구성(수도권대기팀, UNEP 기획단) 등

※ 조직관리의 효율성 평가 1位, 부패방지시책 평가 2位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새로운 핵심업무 발굴과 함께 일하는 방식(민원 실명확인서비스, 회의간소화 등 34개 과제) 합리화

※ 일하는 방식 개선 평가 1位

3. 환경정책 혁신 성공사례 분석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

가. 특별법 제정 필요성

- ☐ 수도권은 호흡기 질환, 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NO_2) 등 대기환경이 OECD국가 중 최악의 수준(멕시코시티보다 대기오염도가 약 1.4배 높음)
-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자동차의 약 46%가 집중되어 대기오염 가중(전국 오존주의보의 95% 이상)
- ☐ 농도규제(濃度規制) 위주의 사후관리방식으로는 이미 환경용량을 초과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난망
- 사전예방적인 총량관리(總量管理) 체계 도입 등 특단의 대기환경 개선대책 필요

나. 추진경위

- ☐ 2002.1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산업계 등의 반대로 추진 난항
- ☐ 2003.2 : 「참여정부 국정 과제」 채택
- ☐ 2003.4 : 연두업무보고시 “수도권특별법 연내제정” 보고
 - ※ 대통령님께서 대기오염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도록 지시
- ☐ 2003.5~7 : 관계부처, 산업계, 민간단체 합동 T/F 구성, 쟁점 합의
- ☐ 2003.12.31 : 특별법 제정 · 공포

다. 법 제정시 당면한 문제점

□ 산업계의 부담 가중에 따른 강력한 반대

- GDP 1만불 수준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대기개선 대책은 시기상조라며, 공장 신규입지 및 외국인투자 위축을 우려하여 반대

□ 지역개발 장애를 우려한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반발

- 광역적인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간 협력이 필수적이나 이해관계 대립

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 정부가 사회적 이슈 설정단계부터 적극 주도

- 수도권 대기오염이 사회 이슈화되기 전에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책의제화 주도
-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국회, 언론 등도 점차 이슈화에 협력

□ '참여가 곧 비효율'이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깨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민주적 효율성 제고

- 종래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었던 NGO, 산업계를 파트너로 인정, 민·관 합동 T/F에 의한 분권적 의사결정(국회, 언론 등에서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 환영)

※ 2년간 총 115회에 이르는 토론회, 간담회, 국회공청회 등 개최

- 지자체 공무원을 수도권 기획단에 파견받아 법 제정단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및 입장 조율

- 합리적 대안(代案) 제시와 한발씩 양보하는 성숙한 타협정신(妥協精神)을 발휘, 갈등을 능동적으로 해결
 -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제 등 특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단계적·점진적 접근)
 -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저공해차량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업계 자율성 및 시장유인기능 강화
 - 당초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산자부 등 관계부처도 국민 건강과 환경-경제의 상생적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

마. 교훈 및 시사점

-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은 국민이 정책주체(政策主體)로 부상하는 새로운 시대흐름(協治:Governance)에 부적합
 - 정책고객인 국민의 참여, 협력 없이는 절차적 민주성(民主性)은 물론 실체적 효율성(效率性)도 확보 곤란
 - 정책결정 초기부터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대화, 참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혁신
- 문제 발생 후 땀질식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려는 서비스(Service)정신 필요
 - 대증적(對症的) 문제 처리방식은 고비용-저효율 초래 및 정부 신뢰성 저하
 - 정책의제 설정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열린 정책결정시스템이 정책 성공의 열쇠

4. 종합평가 및 향후 보완과제

가. 주요 환경정책과제

- 2003년은 사전예방적·총량적 개념의 선진 환경정책 틀을 구축, “정부업무평가 최우수부처”로 선정('01년 이후 3년연속 1位)
- 수도권 특별법 제정 등 주요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2位)하고, 기관역량(1位) 및 국민만족도(2位)에서도 우수한 평가
- 2004년은 실내공기질, 4대강 지천수질 등 주민 건강에 직결된 생활주변 환경을 역점 개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 변화를 가시화할 필요

구 분	주요 성과	미흡한 점
대도시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	• 사회적 합의하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	• 지하철 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미흡
4대강 수질환경 개선	• 총량제 시행 차질없는 준비 • 비점오염원종합대책 마련	• 한강 등 일부 유역지천의 수질악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보완 • 환경기술의 실용화 미흡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국 시행	• 소규모 폐기물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 수도권국토환경지도 제작	• 야생동물 밀렵 성행 및 생물 자원 기초자료 부족

나. 업무혁신 분야

- 2003년은 환경정보화 및 정책고객 확대, 시민명예환경감사관제 도입 등 혁신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혁신문화 정착 및 성과 가시화 미흡
- 2004년은 전 직원이 변화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 혁신을 통해 혁신기반을 공고히 하며, ‘일 중심, 대화 지향’의 혁신문화 정착

II.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1
2.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15
3. 생명의 강을 살리는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18
4. 순환형 폐자원 관리체제 정착 20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5. 백두대간 등 한반도 3대 생태축의 체계적 보전 23
6.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사전평가체계 강화 26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7. 21세기 핵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28
8.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 31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관리역량 제고 33
1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배로 제고 35
11. 농어촌 생활환경의 가시적 개선 37

주요 현안과제

12. 대형개발사업과 토지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대책 39
13. 봄철 황사피해 저감대책 수립·추진 43
14. 아시아 최초 「UN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 48

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 생활 주변의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가. 개 요

□ 최근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SHS: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 등 신규 질병에 대한 국민불안 증대

□ 기술 혁신과 소득 증가에 따라 산업체, 가정 등에서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 증가하여**(국토면적대비 화학물질생산량 세계 5위),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도 급증 추세

※ 약 3만 7,000여종의 화학물질 국내유통, 매년 300여종 신규도입

□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등 국민건강을 보호할 대책 시급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정('03.5)

○ 의료기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03, 2개 시설군→'04.5, 24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5개물질) 설정 및 기준 초과시 환기시설 설치 등 규제조치 신설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 산업체, 농약, 자동차 등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위험성 평가제도 기반 구축('03.12, 위해우려물질 106종 지정)
- 「'03 화학테러대응 추진계획('03.2)」을 수립하고, 화학물질사고 대응 정보시스템 확대

※ 전국 공단 등 사고다발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고물질, 대응기관 등에 관한 DB를 GIS와 연계, 신속한 사고 대응

다. 향후 추진계획

(1)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

-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오염도 전국조사 및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종합대책('04~'08)」수립('04.7)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04.5월말부터 관리대상에 편입되는 의료기관,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을 년 1회이상 측정
 - 신설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換氣設備) 설치를 의무화
-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전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화
 - 신축 아파트 등에 대해 주민입주 전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오염물질을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지침」 제정을 위해 일본 등 외국 사례조사 및 국내 실내공기질 기초조사 실시

□ 유해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建築資材) 사용제한

-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를 도입·시행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접착제, 벽지, 목재 등 건축자재 사용 규제
- ※ '04년부터 단계적으로 2만여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시험(국립환경연구원) 및 기준초과 건축자재 고시 예정

(2) 환경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 화학물질과민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10개년 계획('04~'13) 수립·추진

- 전국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지도를 작성하여 지역별 환경성질환(環境性疾患) 우려물질 파악 및 관리기반 조성
-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판명된 물질의 사용용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취급제한물질」 제도 도입
- 어린이, 임산부 등이 자주 접하는 플라스틱 장난감류 등의 유해화학물질 함유실태 조사 및 용출시험 실시

□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 위해성평가·관리체계 구축

- 해수부, 농진청, 식약청 등과 협의, 다이옥신 환경기준 및 일일허용섭취기준의 법제화 추진
- 다이옥신 배출량 조사결과('01~'04)를 토대로 주요 점오염원배출목록 작성 및 최적관리기준 마련
-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환경잔류실태 조사(16종) 및 위해성평가(6종) 실시

☐ 화학사고 대비물질에 대한 특별지정 관리

- 반도체용 특수독성가스인 실란 등 42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방제 및 사고대응정보 제공

☐ 국제기준에 맞는 화학물질 분류·표시제도(GHS)의 도입, 환경독성실험동 설치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기반 조성

(3) 제품의 환경성 보장제(環境性 保障制) 도입

☐ 제품별 유해물질 허용기준 및 재활용율 기준을 마련, '07년까지 제품의 친환경성을 선진국(EU) 수준으로 강화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재질·구조가 복잡하고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무역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부터 단계적 시행

※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에 대하여 유해물질 규제 및 재활용율 의무화('06.7월부터 시행)

☐ '제품 환경성보장제 추진기획단'을 발족('04.5), 제품 설계 단계부터 Eco-Design을 활용한 유해성, 재활용성 평가체제를 구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환경제품 생산 유도

(4)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

☐ 전국 대기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확대

- 인체·환경 위해성(危害性) 정도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확대 지정('04년말 25종→30종)

☐ 「악취방지법」 제정·공포('04.2)에 따라 악취관리 강화

- 생활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지정악취물질을 확대하고(8종→13종), 고무·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소각장 외 소각 금지 등

2 푸른 하늘, 맑은 공기 확보

가. 개 요

-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03, 1,458만대), 에너지 소비증가(7.5%, OECD 평균 1.8%) 등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도시 대기오염 악화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03.12 제정) 하위법령 및 기본 계획을 확정, 10년내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민관 합동 T/F 논의를 통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정('03.12)
 - 대형사업장(1종)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근거 마련('07.7 시행)
 - 자동차제작사, 공공기관 등의 저공해자동차 보급·구매 의무화 및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대책 추진
- '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한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강화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설치기준 마련, 차령 12년 이상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서울→수도권전역)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매연없는 천연가스버스(4,312대), LPG 개조 청소차(135대) 등 저(低)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에 합의('03.5, 경제장관회의)

다. 향후 추진계획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05~'14)」을 마련, 대기개선목표, 배출허용총량, 저공해차량 보급계획 등 확정('03.9~'04.8, KEI 용역 중)
- ☐ 특별법 하위법령을 제정('04.10)하고,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07.7)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행정자치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수도권대기관리대책 추진조직 보강 및 경유부담금 전환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추진
 - ※ 신설된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인력·재원 확보 시급, 특히 現 예산편성방식('04, 159억)으로는 수도권대책 재원(연간 2천억) 확보 곤란

(2) 경유승용차 시판 후속대책 추진

- ☐ '05년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에 대비, '04년말까지 에너지상대 가격체계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
 - 재경·산자·건교·환경 공동용역 중('03.12~'04.6, 조세연구원)
- ☐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마련('03.8~04.8, 조세연구원 용역 중)

(3)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체계 개편

-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서 경유로 우선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부문 환경세 도입 추진
 -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수도권 대기개선 등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

□ 수도권에 초저황 경유(황함량 430→30ppm)를 시범보급 후 '06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연료 보급 추진

□ 에너지 소비절약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대안 마련

-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 집중연구('04.3~8월, KEI 용역중)

(4)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추진

□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신규 제작자동차의 저(低)공해화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순찰차등 200대), 전기 소형이륜차 등 오염이 적은 차세대 자동차 보급 착수

- 천연가스버스를 7,400대까지 보급하고, 스쿨버스·통근버스·청소차·마을버스 등으로 차종 다원화

※ 보급추이 : 58대('00) → 2,746대('02) → 4,312대('03) → 7,400대('04, 목표)

- '04.7월부터 소형다목적차(RV), 중·대형 경유버스·화물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리강화

-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노후 경유차(2.5톤이하 청소차 1,450대)를 LPG 차량으로 개조(배출가스 약 60% 저감효과) 또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추진(대형 520대, 중소형 1,098대)

-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확대('04년 하반기)

- 대상차종도 종전 12년에서 7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34만대→133만대)

3 생명의 강을 살리는 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가. 개 요

- 2004년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원년(元年)으로 삼아 수(水)생태계 회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환경 개선

※ 한강 등 주요 상수원 수질을 I~II급수로 개선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상·하류 공영정신에 기초한 유역자치제 정착

나. 그간의 추진실적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98~'00) 수립 및 4대강특별법 제정('99~'02)을 통해 선진적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오염총량제 관리부서 신설('02.8 유역제도과,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오염총량과) 및 전문인력 보강(24명, 6개도 각4명)

- 총량제 시행을 위한 목표수질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 한강수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마련('03.12)

- 한강수계(팔당)는 수질개선이 시급하나 임의제 오염총량제 이므로 조기 시행에 한계

- 낙동강 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03.9)

-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02.11)에 따라 낙동강을 시작으로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 낙동강 '03.2~'04.2, 금강·영산강 '03.5~'04.6

다. 향후 추진계획

(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한강수계 경안천 유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첫 실시('04.6)

- 광주시(廣州市) 오염총량제를 국내 처음으로 실시하고('04.6)
같은 유역내 용인시에 대하여도 조기실시 유도

- 한강수계 임의제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추진('04년중
한강법 개정)

□ 낙동강수계 부산·대구시 오염총량관리제 본격시행('04.8)

- 낙동강수계 지자체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 승인('04.3) 및 시·군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 부산·대구지역은 '04.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 시(市)지역은 '05년 8월, 군(郡)지역은 '06년 8월부터 실시

□ 금강·영산강수계는 '05년 8월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수질 고시('04.3)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04.6)

※ 대청호·주암호 상수원 유역 군(郡)지역은 '06년 8월부터 실시

(2)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총량제 시행 전까지 행정자치부와 협의('04년 상반기)하여 일선 지 자체 담당인력 충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내에 「수질오염총량 관리 연구센터」 설치

□ 지역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지자체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오염총량관리 홈페이지 개설 등 교육·홍보 강화

4 순환형 폐자원관리체제 정착

가. 개 요

-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님비(NIMBY)현상의 심화로 매립지, 소각시설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생활폐기물은 소득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98, 45→'02, 50천톤/일)
 - 사업장폐기물은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건축폐기물 급증 등으로 최근 4년간 약 56% 증가('98, 146→'02, 228천톤/일)
- '03.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조기 정착,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기반 강화
 - '07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1kg이하(0.95kg/일)로 낮추고,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6% 감량(400만톤)

나. 그간의 추진실적

- 폐가전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제품책임주의에 기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03.1)
 - 플라스틱연료화시설(5), 폐가전처리시설(1) 등 총 8개소의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 생활 주변 다량발생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촉진
 -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03.12),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유도
 - 1회용품 사용규제사업장 확대(서점, 약국 등 추가), 민·관 합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수칙 확대·보급 등 쓰레기 감량

□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생골재(再生骨材) 수요 확대**

- 재건축·재개발의 환경영향 최소화,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을 원천 감량
- **고품질 재생골재의 생산기반 마련** 및 건설공사의 **재생골재 사용의무화** 등 수요기반 확대
 - **재생골재 품질검사·인증기준 마련, 재생골재 생산·유통 기지 건설** 등(건설폐기물재활용법 하위법령 제정)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감량, 자원화 촉진**

- '05년 직(直)매립 금지에 대비, 「제2차 음식물쓰레기 관리계획('04~'07)」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 처리시설 다양화 등 후속대책 추진
- 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확대(7개소→10개소 이상) 및 처리비용 현실화 등 감량화 유도
- 주부,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 등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32개 지역, 276억원) 및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합동점검('04.1~2) 및 시설개선 실시

□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의 사용억제**

- 1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04.1) 및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 운영 강화
- 성과 종합평가를 통해 중장기 포장폐기물 감량전략 수립·추진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5 백두대간 등 한반도 3대 생태축의 체계적 보전

가. 개 요

- ☐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각종 도서·연안이 개발사업 추진으로 훼손
- ☐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생태계,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할 필요

나. 그간의 추진실적

-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및 도서·연안을 3대 핵심생태축으로 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실천방안 마련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03.12), 환경부장관이 정한 원칙,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및 보전지역 지정관리
- ☐ 「아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고('03.12), 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착수 등 국가생물자원 보전기반 강화

다. 향후 추진계획

(1)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기반 확립

-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시행
 - 백두대간의 핵심·완충지역 지정기준 및 보전원칙을 제시하고, 훼손유형별 복원방안 수립·추진('04.1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하위법령 제정)

○ DMZ 일원에 대한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DMZ 자연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 동·서·남해안 지형 및 생태특성을 고려한 「도서·연안자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 수려한 자연경관(自然景觀)의 보전체계 확립

○ '04년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법
제도 보완

- 자연경관보전계획(10개년)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의 자연경관심의,
자연경관보호구역(특별보호/관리구역) 지정 추진

□ 자연생태 우수지역의 보전·관리체계 개선

○ 생태계보전지역을 3개지역(핵심·완충·전이)으로 확대 지정,
행위제한을 차등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 자연생태마을 지정제도 도입,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 등 생태계보
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win-win 전략)

○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자연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
연생태공원 지정제도 도입('04,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산림, 초지, 해안습지를 대상으로 생태조
사연구, 수원보호, 생태탐방 등 추진

○ '04년 한강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강 하구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추진('04~'08)

○ 국립공원의 자연체험형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설악산 등 42개소, 46억원)

○ 동강유역 사유지를 매수('04, 542천㎡, 60억원), 친환경적 보전관리

□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운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 자발적으로 매입·보전하는 내셔널 트러스트운동 활성화 지원(대통령 공약사항)
 - 신탁재산에 대한 세제혜택, 재산보호를 위한 처분제한 등
- ※ National Trust 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30여개국에서 전개중

(2) 국가 생물자원 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

□ 「국립생물자원관」 공사를 착공('02~'06, 669억원), 국가생물자원 확보, 보전 중추기관으로 활용

※ 향후 권역별 생물자원보전센터(대학교, 연구소 등)를 지정, 협력 강화

□ 「국가생물자원 보전 마스터플랜」 수립('04.12)

- 생물자원 조사·연구 및 한국 고유종 관리체계 구축, 생물자원 보전 로드맵 작성, 환경바이오(Bio)산업 육성 지원 등 추진
- ‘생물다양성협약’의 국가생물자원 인증제도 도입에 대비,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고유종(固有種) 권리선점대책 추진
 - ‘한국고유동식물 도감(2,356종)’ 제작 추진 및 국외반출 집중관리
-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생물자원(生物資源) 확보·활용(BT, 신약 개발 등) 협력체계 강화

□ 야생동식물 보호 및 생태계 위해 외래종(外來種) 관리 강화

- 반달가슴곰 복원 확대(6마리 추가방사),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대책 강화
-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종의 위해등급 목록 작성, 위해종 한약재·식용 활용방안 등 관리대책 추진

6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사전평가체계 강화

가. 개 요

□ 지난 '60년대 이래의 공급·효율 중심의 경제성장에 의한 국토
난개발로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

○ 산림이 전 국토의 65.4%를 차지하고 있고, 택지 등 개발용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어려움

※ 개발용지 확대전망(제4차 국토종합계획) : '02년 4.4% → '20년 9.1%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족쇄(사업자)” 또는 “면죄부(환경단체)”
라는 상반(相反)된 비난에 직면

○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불필요한 사업자 민원을 해소할 대책
필요

나. 그간의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의 분리발주 의무화, 평가항목·범위
확정제도(Scoping) 신설, 대상사업 확대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03.1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개정)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협의대상 확대(58→68개)와 함께 협의
완료 전 사전 인·허가 금지 및 공사중지 등 조치근거 도입
(‘03.6월 시행)

다. 향후 추진계획

(1) 전략적 환경평가체제 구축

- 계획 입안시부터 대안 및 입지 적정성을 평가,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 예방
 -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 **5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사업의 환경성 검토**
 - 평가대상 개발계획의 확대(46→107개) 및 협의시기 조정(계획 승인시→계획 입안시)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환경용량 산정 시범사업 추진 등 전략적 평가기법 개발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서 작성·검토의 내실화

- 평가서 대행계약 분리발주 및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지침 마련
- 평가정보 D/B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04~'06), 평가서작성 지원
- 민원사업이나 습지 등 환경적 민감지역(敏感地域) 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 현지조사** 강화

□ 평가서 협의 및 보완절차를 개선, 협의기간 단축

- 평가서의 조건부 협의를 활성화하여 재보완을 최소화하고, 부실 평가서는 반려하여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
 - ※ '99~'03년 기간중 법정기간(60일)내 협의비율 54.8%, 평가서 보완횟수 1.6회
- 실행행사에 의한 공청회 무산 등으로 평가절차가 지연될 경우 서면조사 등 대체적 주민의견수렴방식 인정
- 평가항목·범위 사전확정제도(Scoping)를 시행,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중요 환경인자를 중점적으로 검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2단계 Eco-2 프로젝트」 추진

7 21세기 핵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가. 개 요

- 지구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등 세계 환경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국내 환경기술 및 산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
 -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고, 특히 사전예방 및 청정기술은 50% 이하
 - 국내 환경산업체는 대부분 영세(매출 10억원이하 67%)하고,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 등 해외진출 지원조건도 불리
- ※ EDCF 이자율 : 한국 2~2.5%, 일본 1%, 스웨덴 무이자
- 2010년 세계 5위권 환경산업(ET) 강국을 목표로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선점전략 추진

나. 그간의 추진실적

- 환경기술 로드맵에 따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10)」 추진('01~'03년간 2,800억원 투자, 460개 과제)
 - ※ 정부 R & D 평가에서 투자확대 대상인 최우수(A등급) 평가('03.8, 국과위)
- 년 15% 급성장하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환경장관회담('03.7, 12), 환경산업 투자포럼 개최('03.12) 등을 통해 한·중 환경산업센터 공동운영 등 5개항 합의
- 해외 친한인사 육성을 위해 아시아 공무원, 산업체대표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장·단기 총 56명)

다. 향후 추진계획

(1) 21세기 ET 강국을 향한 환경기술 혁신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 2단계 사업('04~'07)」 본격착수
('03, 750억원→'04, 850억원)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 환경기술 분야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ECO-STAR Project」 추진

- 지원방식을 '개별과제 지원'에서 '유관연구과제 공동지원'으로
전환, 시너지효과 극대화

※ '04년중 산·학·연 합동으로 '자동차 청정기술저감 사업단',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 구성·운영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외국 우수 환경기술 활용방안 마련

□ 우수 환경신기술(新技術)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제도 시행

○ 중소기업에 환경신기술 검증비용 국고지원(6억원), 환경기술
산업화자금 지원확대(20억원→40억원) 등 환경신기술 사업화 촉진

□ 환경유망업체 및 기술인력(技術人力) 육성

○ 환경학과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산·학·연 연계 인턴십 프
로그램 확대 및 「환경기술인력센터」 설치·운영

○ 환경벤처협회('00.5) 및 창업보육센터('00.10)를 중심으로 유망 환경벤처기업
집중 육성

(2) 환경산업을 미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

□ 「환경산업 중장기 발전전략('04~'10)」 수립 · 시행

- 중국 등 동남아 국가별 특화된 해외진출전략 추진
- 민·관 합동 「환경산업협의체」를 구성, 상시적 협력체제 마련
 - ※ 「1단계 환경산업 발전전략('01~'03)」을 평가, 실질적 지원방안 추진

□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한·중 환경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중국 환경시장 특수(特需, '08 북경올림픽, 서부대개발 등)를 겨냥한 시장 선점전략 본격화
 - '03.7월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합의된 8개 협력사업(공동기술 개발 환경산업투자포럼 정례화 등) 이행
- 중국, 베트남 등 환경협정(MOU) 체결국가(13개국)와의 중점협력사업을 선정·추진하고, 말레이시아 등과 새로운 환경협정 체결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 EDCF 등 각종 차관성 자금을 환경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환경시장 초기진출 지원

□ 환경벤처타운 조성 및 선진적 환경측정·관리기반 구축

- 기술혁신을 주도할 유망 환경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집적 공간 조성계획」 수립 추진
- 측정업체 등 시험·검사기관을 공인하는 국가인정기구(NASEL)를 설치, 측정분석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8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 생산 및 소비체계 정착

가. 개 요

- 환경은 단순한 비용요소가 아니라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되므로 기업경영 및 생산의 환경친화적인 전환 필요
- 환경상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제품의 안정적 수요기반 창출

나. 그간의 추진실적

- 기업의 환경보고서, 환경원가회계, 환경성과평가 등 「환경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 시범보급('03.4, 27개 기업)
 - 에코디자인(Eco-Design) 설계지침 개발, 60여개 기업에 보급
- 환경친화적인 생산 · 소비체계 강화
 - 환경마크 대상품목 확대(창호, 천장마감재 등 추가, 82→94개) 및 국제 상호인증협정 체결('03.7 한-중, '03.12 한-일)
 - 조달청 인터넷쇼핑몰에 환경마크제품 코너 신설
 - 비디오 등 5개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고시('03.5)
- 환경요인을 국민소득에 반영하는 녹색 GDP 개발 추진
 - 환경-경제통합계정 개발 관련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환경분야 기초통계 구축('03.3)

다. 향후 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생산 지원

- 환경경영기법 시범적용 확대('03년 81→120개 기업) 및 「**환경친화적인 금융 가이드라인**」 개발·보급('04.5)
- EU 등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규제에 대응하여, **에코디자인** 기법 확산(63→100개 기업)
- 원·부자재 구입시 환경성을 평가,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물품공급망(ESCM)** 표준지침을 개발·보급
※ ESCM : Eco-Supply Chain Management
- 세계 초일류기업의 경영사례를 벤치마킹, 「**지속가능경영전략**」을 개발하고,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 브랜드화** 추진
- 환경부·전교부 합동 그린빌딩(Green building) 통합인증 기준을 개발, '05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건축물로 확대

☐ 영세 상공인에 대한 환경지원 강화

- 세탁소, 카센터, 인쇄소 등 영세 상공인의 대기관리, 폐수처리 등 부담경감방안 마련

☐ 녹색 GDP 산정 2단계사업('04~'07)에 착수, 환경-경제 통합계정(統合計定) 구축

-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 환경오염물질 배출계정 작성 등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안)」 제정

- 「**친환경상품 보급촉진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등 친환경상품 보급기반 확대
-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센터**」 설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관리역량 제고

가. 개 요

- ☐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지자체가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치중하여 '삶의 질' 저하
- 최근의 지방화·분권화 강화 추세 속에 친환경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 및 제도정비는 미흡
- ☐ 쾌적성, 지역성이 조화된 주민자치적 녹색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 환경역량을 제고할 필요

나. 그간의 추진실적

- ☐ '97년 「환경관리시범 지자체」 지정제도를 도입, 의왕·동해 등 5개 시·군에 적용하던 중 '01년 국고지원 중단으로 유명무실화
- ☐ '03년말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90%)에서 지방의제21에 참여, 호주와 함께 아·태 지역 지방의제21 모범국가로 평가되나, 주민 실천운동으로 도약 필요
- ☐ 산업단지 지도점검업무 위임('02.10, 환경부→시도)에 따른 지자체-환경청간 4대강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성·운영중
- ☐ '98년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16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 지역특화 환경현안 조사 및 환경기술 개발 거점으로 육성

다. 향후 추진계획

(1)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 「친환경 지방자치단체(Green City)」 선정 추진

- 자율적 신청에 의해 지역 환경관리역량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Green City로 지정(민·관 합동)
- 환경예산 우선배정,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 친환경 지방 행정을 위한 건설적 경쟁 유도

☐ 지방의제 21을 지역주민실천운동(Local Action 21)으로 발전

- 전국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유도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의 소양교육 과목으로 확산
-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오염하천의 친수공간화 등 지역 특화 주민참여 녹색실천운동 전개

(2) 지역 자율환경관리 및 기술개발역량 배양

☐ 4대강 민·관 환경감시 Network를 중심으로 오염취약지역 및 취약기(총선전, 장마) 합동단속 강화

- 주민·기업·행정기관간 환경감시 지원·협력창구 운영 및 자율감시(Self-monitoring)제도 병행 추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16개소)를 지역환경기술 개발 및 자율환경 연구 허브(Hub)로 발전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협력체 구성 및 사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03, 4억원→'04, 7억원/센터별 최고 1.5억)

1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배로 제고

가. 개 요

-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섬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약 30% 수준으로 전국 평균(88.7%)에 비해 크게 낙후

※ 상수도 보급률('02년) : 섬(30%), 농어촌(31.1%), 중소도시(80.1%), 대도시(98.5%)

- 섬,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에 집중 투자, 도·농간 수돗물 공급 불균형을 해소

○ 상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관리의 전문화·효율화 병행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94년 이후 10년간 총 1조 6,365억원을 투자, 상수도시설 350개소 설치 추진

※ 농어촌 상수도시설(5,566억원, 169개소), 섬지역 수원지 및 해수담수화시설(2,450억원, 104개소), 중소도시 상수도시설(8,349억원, 77개소) 등

- 시설 설치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

○ 전문인력 및 기술력을 갖춘 수자원공사에서 통합운영('03년말 충남보령 고대도 등 30개소 협약 체결)

다. 향후 추진계획

(1) 급수취약지역의 상수도 인프라 확충

□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지속 확충으로 '07년까지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현재의 2배 수준인 60%까지 제고

○ 2004년 중 농어촌 83개소(712억원), 섬 43개소(465억원), 중소도시 7개소(203억원) 등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u>상수도보급률(%)</u>	<u>2002</u>		<u>2004</u>		<u>2007</u>
- 농어촌	31	⇒	45	⇒	60
- 섬	30	⇒	60	⇒	80
※ 중소도시	80	⇒	83	⇒	88

□ 「수돗물 불균형공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05~'14, 10년)」 수립·추진

○ 농어촌 및 섬지역 상수도 확충사업('94~'04년) 중간평가 및 '2단계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 지역별 취수원 다변화, 광역상수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사업기간내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제고

(2) 낙후지역의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전문화·효율화

□ 재정이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도시와의 통합관리 및 전문기관 위탁관리 추진

□ 상하수도 관련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상하수도 교육센터」 건립 추진

11 농어촌 생활환경의 가시적 개선

가. 개 요

- 멀칭,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농촌폐비닐의 약 43%가 방치 또는 소각되어 농촌 대기오염 및 경관 파괴
 - 연간 농촌폐비닐 발생량(26만톤)의 약 57%만 수거되고 처리 능력 부족으로 매년 4~5만톤 적체('03년말 총 40만톤 적체)
- 축산폐수는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격 경쟁력, 노동력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으로 자원화 부진
 - ※ 축산폐수는 전체 오·폐수량의 0.6%이나, 오염부하(BOD)는 약 26% 차지
-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외국의 1.5~6배), 농경지 토사유출에 의한 토양, 하천오염 등을 막기 위해 친환경 영농방법 개선 필요

나. 그간의 추진실적

- 「농촌폐비닐 마을단위 이장책임 수거보상제」를 도입('02.8), 농민-지자체-재생공사간 효율적 수거체계 구축
- 적체된 폐비닐 처리를 위한 신습식(新濕式) 처리시설(정읍, 12천톤/년) 설치 추진
- 축산폐수공공처리기능 강화, 소규모 축산농가의 수거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뇨관리종합대책('03.5)」 수립·추진
 - 농촌을 중심으로 오수처리대책지역을 확대지정하고('02, 1,221km²→'03, 1,710km²)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03, 517개소/110억원)

다. 향후 추진계획

(1)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개선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收去補償費) 현실화

- 지자체 폐비닐 수거보상비 현실화 유도(kg당 100원 이상) 및 폐비닐 전문수거업체 육성방안 강구

☐ 농촌폐비닐 처리 활성화

- 적체량이 많고(25만톤, 누적재고량의 60% 이상) 재활용이 어려운 저급 폐비닐을 5년 이내 전량처리 완료
- 시멘트 연료화('04, 3만톤), 민간위탁 소각(시범사업), 플라스틱원료(정읍 1만2천톤) 등 다양한 처리방법 병행 추진

(2) 농어촌 축산분뇨 자원화 및 중소하천 수질 개선

☐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확대하여 순환형 농촌사회 구축

- 자원화시설 및 유기질비료 유통센터 설치지원, 구입보조금 확대, 살포장비 보급 등 추진(농림부 협조)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및 개선방안 강구

☐ 농촌지역의 생활오수 적정처리 지원

- 농촌지역 공동오수처리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04.5), 오수처리대책지역 확대('04.10) 및 시설설치 지원('04, 83억원)

☐ 고랭지 채소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마련(농림부 협조)

- 고랭지 채소밭의 대규모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04.5)
 - 경지정리, 주변하천 정화, 받기반 정비, 농경배수 등

주요 현안과제

12 대형 개발사업과 토지구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대책

가. 현 황

-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수립·시행되기 전단계에서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있음
 - 주택 5백만호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지방개발을 위한 특화 발전특구 지정, 인천 등 경제자유지역 개발, 복합산업 단지·미니산업단지 조성 등
 - 건설투자 촉진 및 택지·공장용지 등 개발가능토지의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진행중
-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신도시 건설과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하여 대규모 산업입지 및 관광단지 확보를 추진중
 - 그동안 김포·파주 등 5개 신도시 건설, 수도권내 GB 해제(45백만㎡) 및 대기업 첨단공장 입지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15백만㎡, 18만여호) 등이 기 추진
 - 앞으로도 2012년까지 수도권 주택 3백만호를 건설하고, '20년까지 경기권 추가 신도시 건설과 시화호종합개발(111백만㎡) 추진
 - 또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조정 및 대규모 관광지 입지허용과 수도권내 대규모 GB 해제 검토중

나. 문제점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반영한 종합적·체계적 접근 미흡
 - 국정원칙과의 연계성 및 사회적 합의 결여시 **지역간 갈등 심화와 정책 신뢰성 저하 우려**
 - 국토환경보전 이념과 철학을 담은 종합계획의 부재로 **난개발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대
- 특히 **수도권 위주의 집중 개발**은 국가균형발전 및 안정적 삶의 질 저해
 - **그린벨트 해제, 중·소규모 공장입지 허용 등 토지구제 완화**는 수도권 확장과 **녹지(綠地)부족 심화**
 - ※ 서울의 1인당 녹지면적은 3.4㎡로 런던의 1/8, 뉴욕의 1/9, 스톡홀름의 1/23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대기환경·상수원 수질 등 환경오염 악화**
 - ※ 서울 미세먼지는 런던·파리의 3.5배 수준, 수도권에 오존주의보의 90% 집중

⇒ 개발과 보전을 상생적으로 조화시켜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보전·이용에 관한 종합청사진 필요**

다. 향후 추진방향

- 대규모 국책사업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성(持續性)** 및 **국가균형발전(國家均衡發展)** 이념에 기초하여 관계기관간 협의·검토를 거쳐 체계적·종합적 접근
 - 개발사업 수립·추진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이해그룹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강화

- 각 부처의 개발계획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검토 및 조정장치 마련 필요
- ‘先환경계획 - 後개발’에 따라 국토 전체의 환경가치를 체계적으로 구분·보전하기 위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확립
 - 건교부 국토종합계획(2000~2020)과 조화되는 「국토환경보전종합계획(10개년, 2006~2015)」 수립·추진
 - 수도권('03.12)에 이어 단계적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 ‘보전가치가 큰 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구분 관리하여 환경용량(環境容量)을 고려한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
- 사전환경성검토(事前環境性檢討)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막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국책사업의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고려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적 환경평가로 발전시켜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한 최적 대안 모색
- 특히 수도권관리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같은 조건이면 수도권보다 지방 우선으로” 추진
 - 그린벨트의 녹지총량(綠地總量) 관리, 훼손녹지 복원 등을 통해 도시생태축을 살리는 그린벨트의 역할과 관리기능 재정립 필요
 - 2천만 수도권주민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주요 개발사업 및 토지규제 완화계획

구 분	사업계획	주 요 내 용
도시건설	주택500만호 건설	- 공공택지 1억3천만평(총 2억6천만평)공급하고 이중 300만호를 수도권에 건설(계획)
	5개 신도시 건설	- 판교, 파주, 화성, 김포, 수원(2,179만평, 추진중)
	뉴타운 개발	- 강북, 서남권 12곳 뉴타운 및 5개 균형발전지구(계획)
	경기권 신도시건설	- 6대 광역축 각 3~4개 건설(1억2천만평, 계획)
	기 타	- 아산신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중)
경제·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 인천, 광양, 부산·진해(1억2천만평, 추진중)
	산업단지	- 도시 주변 미니 산업단지 허용(계획) - 수도권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첨단공장 입지 허용(LG필립스,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추진중)
관광지	관광지 개발 확대	- 관광인프라 확충 및 골프장 규제 완화(추진중)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허용(계획)
교통 및 수자원	광역교통망 확충	- 수도권 광역전철망 3배 확대(500→1,500km, 계획) - 2개 고속도로 신규 착수(춘천,삼척), 도로 신·증축(1,936km) 및 고속철도·철도 확충(계획)
	수자원 확보	- 화북,감천,성덕 댐 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토지이용 규제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	- 특구내 토지규제 완화 및 건축자유화(계획)
	토지이용규제완화	- 개발가능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혁(계획) - 관리지역 소규모 농장, 물류창고 신·증축 허용, 계획관리지역 1만㎡이하에 소규모 공장허용(계획)
	그린벨트 해제	- 수도권 581곳 해제(1,411만평, 계획) - 7개 중소도시 전면 해제(33,424만평, 완료)
	군사시설보호구역	-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8,332만평, 계획)
	농지제도 개선	- 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계획)

13 봄철 황사피해 저감대책 수립·추진

가. 개 요

- 중국, 몽골 등의 급속한 사막화로 '98년 이후 봄철 황사 발생이 증가하여 인체, 농작물 및 가축, 산업계 등에 광범위한 피해 우려

※ 년평균 황사일수(서울) : 3.9일('80년대) → 7.7일('90년대) → 18일('00년 이후)

- 금년 황사는 예년 평균수준(연 3~4회) 발생 전망

- 황사발원지의 지난 가을이후 누적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아 극심한 황사 발생가능성은 낮음(기상청)

- 2.14일 서울·경기 제외한 전국에서 첫번째 황사 발생(서울 2.25일)

나. 그간의 추진실적

- 2002년 극심한 황사 피해를 계기로 황사 특보제 도입 및 부처별 황사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추진

- 황사특보제 도입·운영('02.4 기상청)

- 단계별로 실외활동 자제(금지) 권고, 초등학교 휴교 등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3단계 발령 : 정보($300\mu\text{g}/\text{m}^3$ 이상)→ 주의보($500\mu\text{g}/\text{m}^3$ 이상)→경보($1,000\mu\text{g}/\text{m}^3$ 이상)

- 국무조정실 주관 황사피해 최소화대책 수립·추진('04.2.24)

- 황사 예·특보제 운영(기상청), 어린이 보호대책(교육부), 산업보호대책(산업자원부) 등

- 시·도별 황사상황반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

다. 향후 추진계획

- 단기적으로 황사발생 전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 황사특보제를 세분화, 종전 황사특보(3단계)에서 황사예보(3단계)·특보(2단계)로 전환
 - 환경부·기상청간 협조체계를 구축, 황사 감시체계 강화
 - 한·중 공동 황사감시관측소 설치(5개소), 국내 황사관측소 보강(7개소→11개소) 등
 - 질병예방(호흡기·안질환), 산업체 보호(반도체 등), 농·축산물 피해저감 등 분야별 황사저감대책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사업 등을 통한 근원적 저감대책 수립·추진
 - 황사 방지 국제협력사업 본격 추진
 - 한·중·일·몽골 및 UNEP, ADB, ESCAP, UNCCD 공동 「황사대응 GEF사업」 추진('03.1~'04.6, 100만불, 환경부)
 - 중국서부 생태복원 능력향상사업 추진('03.1~, 환경부, 연 10만불)
 - 중국서부 5개지역 조림사업 추진('00.10 한·중 정상회담, '01~'05년간 500만불, 외교통상부·산림청)
 - 황사에 의한 건강위해도 지표기술 개발('02~'05, 환경부), 황사가 농작물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사업 추진
 - 황사 집중발생기간중(3~5월) 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집중홍보, 사전 대응능력 제고

<붙임1>

부처별 황사피해 최소화 대책

부처명	주요업무	'04년도 세부추진계획
환경부	○ 황사피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 미세먼지, 중금속 등 측정 - 국제협력사업 추진 - 황사의 위해성 등 연구	- 황사종합대책 마련·시행 - 미세먼지 상시측정(194개소) 기상청 실시간 전송, 측정소 증설(11개소) - 황사중 중금속, 다이옥신 측정 - 국제협력 및 황사 위해성 연구 강화
교육인적 자원부	○ 어린이 보호대책 - 시·도교육청 등은 휴업, 단축수업 조치 등 결정사항을 학교에 통보 - 야외학습 중지 등 지도활동 강화	- 황사 비상대책반 운영 -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와 비상연락망 구축, 신속한 상황전파 - 황사특보 발령단계별 대응 조치
외교 통상부	○ 황사관련 국제협력사업 지원	-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시 황사문제 논의 - 관계부처 국제협력사업 지원
행정 자치부	○ 대국민 홍보 및 재해대책 예산지원 - 황사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시행	- 대국민 홍보실시 · 반상회보(3,4월) 게재 · 대형전광판 문자표출, TV방송 및 홍보 비디오 활용 홍보(3~5월) · 홍보전단지(5만부) 제작·배포 등
농림부	○ 농·축산분야 황사피해 예방대책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의 관리 대책 추진 등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의 관리요령 홍보·지도 -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사업(5개 과제) 추진
산업 자원부	○ 산업보호대책 - 조선·반도체 등의 업종별 피해 방지 대응체계 구축	- 업종별 피해방지 대응체계 구축·운영 - 야외 작업일정 조정, 작업자 안전조치
건설 교통부	○ 항공기 안전 및 결항 대책 -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 결항시 대체 교통수단 확보대책 강구	- 인천공항 저시정 접근절차 등급상향 후속조치 - 비상대응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항공교통상황 신속 전파
국정 홍보처	○ 황사피해 예방 홍보방안 - TV 방송 자막, TV·라디오 방송, 재외 주재 홍보관 등 활용	- 황사 피해예방 홍보 · KTV 등 국정홍보처 보유매체, TV방송 자막, TV, 라디오 방송 등 - 재외 주재 홍보관 활용 황사정보 수집
기상청	○ 황사예보 강화 방안 - 황사 예보 및 특보 발표기준 보완 등	- 황사담당 예보관(1명), 황사전문가단(5명), 한·중 황사예보관 교류 - 수치예보모델 활용 등 예보기능 강화 - 국외 관측소 설치(5개소)
식품의약 품안전청	○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대책 -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 황사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 지도 계몽, 협회를 통한 준수조치
질병관리 본부	○ 황사대비 국민보건 안전대책 - 방역기관 단계별 행동요령	- 전국 안과전염병표본감시체계 운영 - 다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붙임3>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 황사 발생전

가정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교 등 교육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벧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중

가정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시 보호안경·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방목장 가축은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노출 방지 ○ 축사의 출입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함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건조, 벧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 종료후

가정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축산· 시설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 ○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 구제역 증상과 유사한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14 아시아 최초 「UN 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

가. 의 의

-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UN 주관 세계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우리의 우수환경정책 및 환경기술 등을 집중 홍보, 21세기 환경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나. 회의개요

- 명 칭 :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4.3.29~3.31,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 동 회의에 앞서 3.27~28(2일간) 민간단체 중심의 「지구시민사회포럼」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정책개발 전문가 회의」 연계 개최

- 참가자 : 1,200여명(120여개국 환경장관 등 정부대표, 국제기구 등)

- 주요의제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후속조치로 물/위생/인간 정주 분야 국제사회 이행계획 논의
 - 물관리정책이 건강, 위생 및 빈곤타파의 핵심요소임을 인식, 각국의 경험·사례에 근거한 정책수단 및 재원확보 토의
- 국제환경관리체제(Int'l Environment Governance)강화 방안
 - UNEP의 역할 제고를 위한 회원국분담금 증액, 국제환경협약의 조정권한 부여, 환경상태평가 전문기관 설치여부 등
- 지구환경상태의 평가, 감시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
 - 지구환경상태의 지속적 관찰·평가 및 개도국 능력강화 방안 등

다. 그간의 추진실적

- ☐ UNEP 제22차 총회(케냐, 나이로비)에서 한국 개최 결정('03.2)
- ☐ 환경부내 「UNEP 특별총회 준비기획단」 설치('03.5) 및 행사 기본 계획·세부실행계획 수립('03.8~12)
- ☐ 「회의개최 관련 대한민국-UNEP간 협정서」 체결('03.9)
- ☐ 세부실행계획(출입국·수송·안전 등 15개분야) 수립('04.1~2)

라. 향후 추진계획

- ☐ UNEP 특별총회/세계환경장관회의 개최('04.3.29~31)
 - 환경산업기술전 개최, 국내 우수환경정책 홍보 등을 통해 21세기 환경선진국가 이미지 고양
 - UNEP사무총장 특별행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 국제환경심포지엄 등을 개최, 환경보전 국민의식 고취
- ☐ 국제환경협상에 적극 대응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이행기반 구축
 - 매립가스자원화(청정개발체제) 외국투자 유치('04년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대비 온라인 모의거래 추진
 -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상에 전략적 대응
 - 환경서비스 및 환경상품 양허목록 작성·제출('04년 상반기), 수입상품·서비스의 국내 환경기준 적합성평가 실시 등
 - 지식전파사업 확대(중국, 베트남 등 47만불), '05년 UN ESCAP 환경장관회의 국내유치 등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Ⅲ. 2004년도 업무혁신 목표 및 추진계획

1. 업무혁신 목표

- ☐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국민이 신뢰(信賴)하는 고객 감동의 환경행정 구현
- ☐ 변화선도팀을 중심으로 혁신문화(革新文化)를 내부고객인 조직 전구성원이 체화, 조직역량(組織力量)으로 발전

2. 세부 업무혁신방안

가. 상시혁신체계를 구축, 자발적 혁신문화(革新文化) 정착

- ☐ 상시적 혁신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체계 정비
 - 혁신담당관실 신설 및 핵심 혁신과제별 담당팀 구성·운영을 통해 비전 설정, 커뮤니케이션, 진도관리 등을 책임 수행
 - 조직 총량범위 내에서 업무 통폐합을 통해 환경수요가 증가하는 핵심기능 중심으로 조직 재편
 - ※ 확 대 : 화학물질(1과→3과), 교통공해(1과→2과), 대기총량제도과(신설)
 - 통폐합 : 자연공원+자연생태, 생활오수+하수도, 수도정책+수도관리 등
- ☐ 자발적 혁신문화 확산·전파
 - 혁신활동에 대한 전직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혁신 성공사례 전파와 상호학습
 - ※ 업무혁신 워크숍 및 성공사례 발표회 정기개최, 혁신사례집 발간 등
 - 전직원이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새로운 핵심업무 발굴” 실천

□ ‘업무혁신, 성과 위주’의 통합 인사평가 시스템 정착

- 환경정책과 관련이 깊은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연구소) 등과의 인사교류 선도, 확대
- 전문직위 지정 관리 및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개인의 능력, 전공 등을 고려한 전문가 양성
- 온라인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연공을 타파한 발탁 등 특별승진 활성화
 - 직원의 업무혁신 추진실적을 평가, 인사 인센티브와 연계
- 부처 내외의 인사추천창구 개설 및 국(局)내 전보권을 국장에게 위임하여 유연한 적재적소 인사 구현
- 8개 지방청 및 산하기관의 혁신노력을 평가, 기관장 인사, 예산편성 등에 반영

□ 환경정보화를 통한 e-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시스템화

- 고객 중심, 성과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국가환경정보종합정보시스템과 대국민 종합서비스센터 구축 등 환경정보서비스 고도화 기반 마련
- 본부-지방청간 화상회의, 인터넷 방송시스템 등을 구축, 혁신비전 공유 및 성공사례 실시간 확산

나. 국민이 정책주체가 되는 고객지향(顧客指向) 환경 서비스 구현

□ NGOs, 산업계 등과의 상시대화채널 및 정책참여 확대

- 시민명예환경감사관 확대(10→20명)와 부패취약분야 사이버 상시감사시스템 및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체계 구축
- 종교(宗教), 민간단체 등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이상 정례 개최
- 「환경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04.6), 환경관련민원 개선 및 환경규제 혁파에 적극 활용

□ 고객 지향의 환경서비스 발굴

- 민·관·학 공동운영 e-환경교육 활성화
 - 어린이 대상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과목 숙제도우미, 환경상식 백과 등 계층별 환경교육 강화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에너지·자동차 환경위원회 등을 성공적인 민관 합동 정책참여 모델로 정착 발전
-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수단에서 시장메카니즘 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 등으로 정책수단 다양화
- 정책고객관리 D/B 확대('04, 10만명) 및 여론주도층, 시민단체 등 정책고객별 특화된 정보콘텐츠 제공

3. 혁신 체크리스트(환경부)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혁신 마인드	1 부처의 혁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 하고 있는가?	○ 환경비전 정립 ○ 공유 활동	○ 토론회 10회를 거쳐 비전 정립 ○ 비전을 환경중기계획에 반영, 700권 배포 및 교육, 인터넷 홍보	○ 내부 교육 및 홍보 ○ 계획 추진 상황 상시 점검
	2 부처 구성원(특히, 실· 국장급 및 일반직원)의 혁신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 간부 혁신 활동 ○ 토론회 등 직원 혁신 의식 제고	○ 간부진으로 혁신 자문단 구성 ○ 간부 연찬회 및 혁신 관련 토론회 6회 ○ 실무관리자, 6급이하 직원, 여성공무원 연찬회 등 7회	○ 혁신자문단 토론회 정례화 ○ 주니어 보드 등 혁신모임을 상설화
	3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는가?	○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 혁신팀과 자문단 토의를 거쳐 부처 우수사례 발굴(국무 조정실 3건 제출) ○ 우수사례를 인터넷 업무혁신방을 통해 홍보 및 교육(53건)	○ 업무혁신대회 운영 ○ 업무혁신방 운영을 강화
혁신 인프라	4 상설화된 혁신전담 조직에 핵심인력을 배치하고 자발적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혁신관련 조직현황 ○ 혁신활동실적	○ 업무혁신 T/F 구성 ○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조직혁신 지원업무 수행 및 우수인력 배치 ○ 혁신관련 토론회 49회 개최	○ 혁신담당관 신설 ○ 부처내 우수인력 배치 ○ 업무혁신 T/F를 확대하고 상설화
	5 객관적인 혁신지표를 통해 혁신성과를 평 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평가	○ 비전을 담은 중기계획 170개 과제 추진성과 평가('04.2월 완료) ○ 업무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성과금 등 인센티브 부여	○ 개인별 업무평가 체계를 강화 ○ 업무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6 업무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하고 있는가?	○ 규제 등 업무프로 세스 개선 ○ 불필요한 업무 감축	○ 전자문서에 의한 유독물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40건 완료 ○ 회의 간소화 등 11건	○ 폐기물 처리증명 개선 등 50건 선정 ○ 업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도출 및 감축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국 정 과 제	7	부처 구성원들이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와 소관업무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국정과제 및 철학, 지시사항 내부전파 및 교육	○ 지시사항 등 내부 전파 62회 ○ 변화의기술 등 국정 철학 교육 및 책자 배포 등 4회	○ 국정과제, 지시 사항 등을 계획에 반영·추진 ○ 국정철학 교육강화
	8	국정과제 로드맵 중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 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공약과제 등 국정 과제 추진 상황	○ 67개 과제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약과제 등 국정 과제 지속 추진
	9	부처 소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공약과제 등 국정 과제 추진 상황 평가실적	○ 분기별 평가	○ 분기별 평가 - 평가 강화 시행
대 화 와 협 력	10	인사교류·정보공유 등 부처 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 국가-지방, 정부 -민간 인사교류 ○ 부처간 협력실적 ○ 부처간 실무공무원 협의회	○ 7명 ○ 12건 ○ 3건	○ 16명 ○ 계획입안 단계부터 타 부처와 협력 ○ 부처간 실무공무원 협의회 강화
	11	상하 직원간 수시로 대화·토론하는 등 조직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가?	○ 직원 환경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 간부와 직원이 함께 하는 전문연구회 ○ 부서별 간부-직원 토론회	○ 5회 ○ 12회 ○ 35회	○ 정례화 ○ 분야별 전문연구회 활동 강화 ○ 부서별 간부-직원 토론회를 정례화
	12	토론기법 개발·토론 결과의 업무반영 등 생산적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 토론회 결과 업무반영 ○ 토론기법 교육	○ 5회 ○ 4회(4일) - 외부강사 4명	○ 토론회 정례화 및 반영결과 점검
대 외 커 뮤 니 케 이 션	13	기추진중인 방법 외 에 부처 정책에 대 한 홍보채널을 다양 화하고 있는가?	○ 장차관 정례브리핑 ○ 정책고객 DB구축 ○ On/off라인 홍보 자료 발송 ○ 인터넷 여론조사	○ 12회 ○ 52천명 ○ 4만명 ○ 4만명	○ 40회 ○ 48천명 추가 ○ 10만명으로 확대 ○ 10만명으로 확대
	14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 하고 있는가?	○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체 참여를 위해 제도화한 정책공동체 운영 ○ 민간 및 종교단 체 환경협의회	○ 250회(대기:100, 수질:80, 폐기물:40 자연:30) ○ 7회	○ 280회 ○ 8회
	15	전 부처 구성원이 적극 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도록 지원·동기 부여하고 있는가?	○ 홍보기법 교육 ○ 홍보우수직원 포상	○ 2회(외부강사1, 내부교육1) ○ 3명	○ 4회 ○ 우수직원 포상 강화

<별첨 1> 연두보고 및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1) '03 연두업무보고 추진상황 : 8건(완료 4건, 추진중 4건)

번호	보고내용	2003 목표	목표대비 실적	평가결과
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연내 법제정 완료	법 제정 완료('03.12)	완료
2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합리적 해결 중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강화	-서울외곽도로, 경부 고속철도 노선확정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03.11~12, 위원수 34→77명)	완료
3	4대강 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총량관리제 성공적인 정착 준비 -비점오염원 특별관리 대책 마련	-광주 총량관리계획안 ('03.12) 및 낙동강 목표수질 설정('03.9) -관계부처 합동 비점 오염원관리종합계획 수립('03.12)	완료
4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 구축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조기 정착 -에코디자인 보급기반 마련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전국 시행 -에코디자인 설계지침 개발·보급	완료
5	경유승용차 국내시판 허용에 따른 대책	경유차량 확대에 대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세부 보완대책 마련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정부방침 확정('03.5), 연구용역중	추진중
6	보전과 개발이 조화 되는 국토환경 관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및 전략환경 평가제도 도입 -자연경관보전대책 마련	-수도권평가지도 제작 및 전략환경평가 연구 용역 완료('03.1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법개정 추진중	추진중
7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소각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 효율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각시설 주변 환경 조사('03.8~'04.1), 화학사고대응 정보 시스템 확대 등	추진중
8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확대 -환경산업 해외진출	-환경기술 R&D 확대 (700→750억원) -한중 환경산업센터 확대('03.10), 운영	추진중

(2)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 : 16건(완료 9건, 추진중 7건)

<환경부>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사항	비 고
1. 경유자동차 시판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시행 (‘03.4.2 환경부 업무보고시)	○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대기질 개선 대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키로 재경부 등 관계 부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합의(‘03.5.30) - 수도권특별법 연내 제정 -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04년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부착, 무·저공해 자동차 및 초저황경유에 대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 「경유승용차 허용관련 재정지원방안 연구」 연구용역중(‘03.8.28~‘04.8.27) ○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03.12.10) -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국가 수준(EURO-4)으로 강화(‘06년 시행) 등	추진중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추진 (‘03.4.2 환경부 업무보고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공포(‘03.12.31) - 사업장 배출오염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등 ○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15명)가 참여하는 T/F 회의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검토·조정(‘03.7.3) ○ 사업장 오염총량 관리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정부안을 ‘03.8월까지 마련키로 관계부처와 합의(‘03.5.30) - 재경부 등 6개부처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	완 료 (‘03.12.31)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상황	비 고
3.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 사업시행전의 기안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인 고려 필요 ('03.4.2 환경부 업무보고시)	○ 전략환경평가 도입기본계획 및 법 개정안 마련 등을 위해 연구사업 추진('03.4~12) -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하고 법 개정안 마련 ○ 관계전문가 포럼 개최(5회, KEI)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의 당위성,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방향 등 논의 ○ 사전환경성평가제도 개선('03.6.30) - 협의대상 사업을 58개에서 68개로 확대 - 협의 완료전 개발사업 허가금지, 공사중지 명령 등	추진중
4. 전국도에 대한 국토 환경성평가지도 작성 ('03.4.2 환경부 업무보고시)	○ '05년까지 전국도에 대해 연차적으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 완료('03~'05) ○ 수도권지역 평가지도 작성 완료('03.11.20) 및 국무회의 보고('03.11.23) -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03.12) ○ 국토환경성평가 방법과 기준, 평가결과의 등급화 및 등급별 관리 기준 등 관계전문가 의견수렴(3회)	추진중
5. 댐건설 관련 물 관리 대책은 건설교통부와 이견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보고 ('03.4.2 환경부 업무보고시)	○ 댐 건설 관련 물관리 대책 마련 자료 조사 - 농림부, 건설교통부의 소관부처별 물 부족량 전망, 댐 건설 현황 및 추진계획 등 ('03.4.16) ○ “물관리정책 개선방안” 초안 심의('03.4.23, 간부회의시) ○ 물 관리정책 개선방안을 대통령께 보고('03.5.9)	완 료 ('03.5.9)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상황	비 고
6. 보길도 상수원댐 건설 관련 - 환경부장관 현장방문 등 해결방안 검토 ('03.4.10 수석·보좌관 회의시)	○ 댐건설사업 현황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보길도 댐증축 검토위(15인) 구성('03.4.14) ○ 검토위원회 합동회의 개최(2회) - 보길도 상수도사업 설명 및 관로공사 재개 결정 ○ “보길상수도 기술검토 소위원회” 구성('03.6.19) 및 회의 개최(4회) - 댐 증축에 대한 기술검토 완료 및 정수장 증축 결정 ○ 보길상수도댐증축검토위원회 최종회의결과('04.2.19), 댐 증축 결정 보류 - 다만 관로와 정수장 개선 후에도 물 부족이 확인될 경우 댐증축 등 대책 마련	완 료 ('04.2.19)
7. 백두대간 훼손관련 - 백두대간 훼손실상을 고발한 영상물 준비 - 국회계류중인 2개의 백두대간보호 특별법 내용보고 ('03.4.22 제18회 국무회의시)	○ 국무회의시 보고 완료('03.4.29) - 백두대간 훼손실태 영상자료 상영(15분) - “백두대간 훼손실태 및 보전대책” 대통령보고 (5분, 환경부차관)	완 료 ('03.4.29)
8. 백두대간 훼손관련 -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백두대간 보전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03.4.29, 제19회 국무회의시)	○ 백두대간 보전대책 추진 보고('03.6.4, 제25회 국무회의)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공포('03.12.31) - 박인상 의원 대표발의('03.8.21)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주요내용 및 기능 분담에 대해 농림부(산림청)와 합의('03.10.7)	완 료 ('03.12.31)
9. 쓰레기 처리대책 - 수해 쓰레기 수거 처리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시스템 구축 ('03.6.17, 제27회 국무회의시)	○ 수해쓰레기 발생시 관계부처간 신속한 쓰레기 수거시스템 및 협조체계 구축 운영('03.6.25) - 행자부, 국방부, 농림부, 건교부, 해수부, 문광부, 산자부, 산림청, 시·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 수해쓰레기 미처리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및 조속처리 완료토록 독려('03.6.25~28)	완 료 ('03.6.25)

〈전부처 공통〉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상황	비 고
10. 인사시스템 개혁 관련 - 각 부처는 의문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 우선시행 (“03.4.8, 제16회 국무회의시)	○ 산하기관장 선임시 추천위원의 사전 심사제 도입(“03.4) - 환경관리공단 등 4개 산하기관장 임명시 사전 심사 실시 ○ 건교부와 4급 공무원(2명) 인사교류 실시(“03.4.30) ○ 승진심사 다면평가 확대실시 및 직위 공모제 도입(“03.5) - 국장급, 과장급 승진·전보시 ○ 외부인사 공개채용 - 국제협력관, 정보화담당관, 대기물리과장 ○ 정책보좌관제 도입 - 국장급, 과장급 각 1명 임명 ○ 민·관 상호이해를 위한 민간기업체 공무원 파견 -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각 1명(4, 5급)	추진중
11. 환경부 홈페이지 운영 관련 - 환경부의 홈페이지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속적 과제로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검토 할 것 (“03.4.8, 제16회 국무회의시)	○ 환경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확대 - 국장급 이상의 결재문서 홈페이지 공개(“03.4.10) - 대화광장에 업무혁신방 신설(“03.5.15) ○ 홈페이지 기능개선 완료(“03.10) - 홈페이지 화면 재구성 및 기능 개선 - 시각장애인,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소속기관 홈페이지 관리실태 평가(“03.9.10) - 소속기관 홈페이지 지속 개선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12회)	완 료 (“03.12)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사항	비 고
12. 개혁성공을 위해 개혁 인프라 구축 필요 - 개혁추진의 내부 효율성 평가시스템, 개혁추진 우수공무원 보상 등 인센티브 제공, 정부조직을 혁신조직으로 전환 ('03.4.17, 제1회 국정과제 회의시)	○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업무혁신 4개팀 구성, 이를 지원할 자문단 구성('03.5.7) - 정부혁신반·지방분권반(6회) - 국가균형발전 추진반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반 ○ 업무혁신공유방 설치·운영 - 홈페이지내 “업무혁신방” 신설('03.5.15) 운영 - 청와대 업무혁신공유방에 혁신사례 53건 게재('03.12) ※ 대통령비서실에서 1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	추진중
13. 전자정부 추진방향 - 전자정부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부처 장관을 보좌할 CIO 임명 ('03.5.6, 제20회 국무회의시)	○ 정보화책임관(CIO) 지정·운영('03.6) - 직위 : 기획관리실장 - 주요기능 강화 ·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 정책·계획 수립·추진시 정보화의 연계·조정 · 행정처리과정의 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 각종 시스템간 환경정보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강화('03.11) -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조직의 일원화, 지식평가 등('03.11) ○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03.10)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대책 수립('03.8)	완 료 ('03.6)

지시사항 요지	주요 조치상황	비 고
14. 장애인 고용대책 관련 - 각 부처 장관은 여건이 어렵더라도 채용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03.6.3, 제25회 국무회의시)	○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목표(2%) 초과달성(2.4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 2.41%(27명/1,120명)로 초과 달성('03.6)	완 료 ('03.6)
15. 민원제도 개선 - 각 부처는 민원창구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관련민원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03.6.24, 제28회 국무회의시)	○ 「환경민원제도개선팀」 구성·운영(3회) ○ 민원제도개선 5개과제 발굴·정비중 - 오·폐수 병합처리시설의 특정유해물질 규제완화 - 수렵장내 도로로부터 600미터이내 지역의 수렵금지 장소지정 규제개선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구체화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준 재정립 -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인터넷 지로) 제도 도입	추진중
16.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관리 - 각종 정책 결정시마다 이해집단을 파악하여 자문 및 홍보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별 고객관리체계를 만들고 적극 관리할 것 ('03.7.29, 제33회 국무회의시)	○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에 대한 추진방침 확정('03.10) - 고객 D/B(자문 및 홍보위탁대상) 구축 - 고객 5만명 이상 확보(여론주도층 인사, 민간단체, 학계 등) 추진 ○ 정책별 고객 5만2천명 확보 및 D/B 구축 완료('03.12) ※ '04년도에 고객을 10만명으로 확대	추진중

<별첨 2> 환경부 주요업무 혁신사례

제 목	일 자	내 용	비 고
1. 환경분야 업무혁신팀 구성 및 업무혁신 공유방 설치·운영	'03.5.7	○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4개 실무 추진반(정부혁신반, 지방분권반, 국가균형발전반, 동북아경제중심추진반)을 구성 -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과 부내 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단을 둠	
	'03.5	○ 홈페이지에 업무혁신방을 개설·운영하여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조직원 자기혁신 유도 - 청와대 “업무혁신공유방”과 동시 등재되도록 개편 - “업무혁신공유방”의 우수사례 177건중 환경부 14건으로 장관급 단위부처 중 1위	
2. 인사교류	'03.4.30	○ 개발과 보전의 상생적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부처간 인사교류 - 건설교통부와 인사교류(1년간, 과장급 1명, 4급 1명)	
	'03.1.20	○ 민·관 상호이해를 위한 민간기업체 공무원 파견 - 삼성전자(1년간, 5급 1명) ○ 민간전문가 파견계획 수립(03.11.17) - 대상자 : 서기관 1명 - 파견대상업체 : 유한킴벌리 - 파견예정기간 : 1년간	
3. 개방형직위 조정	'03.6.12	○ 민간에 개방의 필요성이 높은 직위로 조정 및 대체 - 상하수도국장→국제협력관으로 조정 - 낙동강청장→정보화담당관 및 대기물리과장으로 대체	
4. 전산직 보직범위 확대	'03.9.9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한정된 부서에 배정된 전산 직렬을 전 부서로 개방화	
5. 국민참여 환경규제혁파 T/F 구성	'03.11.24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선·폐·준치 결정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평가 - 구성 : 차관(팀장), 민간위촉위원 6인, 환경부 소속 당연직 위원 4인	

제 목	일 자	내 용	비 고
6. 필요성 감소한 위원회 폐지	'03.6.5	○ 총 29개 위원회 중 한강분류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 등 12개 폐지	
7. 기능직 여직원의 업무 범위 확대	'03.9.2	○ 기존 타자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였던 기능직에게 각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유업무를 분장하여 기능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8.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의 시민단체 및 여성 참여 확대	'03.11	○ 여성 위촉을 확대('03목표율 : 32%) - '03.1 : 28%→ '03.11 : 35% ○ 시민단체 위촉을 확대('03목표율 : 20%) - '03.1 : 14%→ '03.11 : 22%	
9. 시민명예환경감사관 위촉	'03.7.25	○ 시민통제에의한 공직사회 부패·부조리척결을 위해 시스템적 개혁추진 - 환경부 명예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예규) - 인터넷공모 및 시민단체·학계추천을 받아 시민명예 환경감사관 10명 위촉 - 한국자원재생공사 종합감사 등 2회에 걸쳐 시민 감사관 5명 참여	
10. “찾아가는 눈높이 환경 교육”운영	'03.9.13	○ 환경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초등학생, 주부, 군인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 환경교육 실시 - 차량에 실험실습장비 및 영상물 등의 교육자재 탑재 - 교육실시 : '04.3월 신학기부터	
11. 직원 사기 진작계획 수립·추진	'03.8.13	○ 가정의 날 지정·운영 - 매주 목요일 정시퇴근	
		○ 외빈초청 문화행사 실시 - 작은 음악회 실시 : 격월 시행	
12. 불필요한 회의 감축	'03.3	○ 회의 감축 - 확대간부회의 : 월 1회, - 장관주재간부회의 : 주 1회, - 차관주재간담회 : 주 1회 ○ 토론 문화 정착 유도 ○ 구내방송 실시로 불필요한 전달 회의 생략	
13. 측정망 인터넷 공개	'03.1	○ 대기오염도를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	
14. 수돗물수질 실시간공개 시스템(Water Now) 가동	'03.2.21	○ 수돗물불신감 해소를 위해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 공개항목 : pH, 잔류염소 등 4개 항목 - 공개방법 : 5분 간격으로 데이터 및 그래프 공개	

제 목	일 자	내 용	비 고
15. 민주적인 회의방법 도입	'03.3	○ 회의좌석의 서열 구분 없이 정방형 배치 및 회의 시간조정 ○ 복장자유화 및 음료의 셀프	
16. 장·차관 영접방법 개선	'03.4.23	○ 장·차관 출·퇴근시 관계자 마중·배웅 폐지	
17. 참여와 토론을 통한 정책결정 및 업무혁신을 위한 내부 토론회 (10회) 개최	'03.3~12	○ 참여정부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장·차관 및 중견관리자 이상 공무원 등 80여명 (외부전문가 5명 포함) ○ 일하는 방식개선 등 업무혁신 토론회 - 장·차관 및 서기관·사무관급 공무원 80여명 ○ 조직발전 및 행정여건 개선 등을 위한 토론회 - 6급이하 직원 224명 ○ 여성의 역할과 미래환경행정 비전에 대한 토론회 - 장관 및 여성공무원 130여명 ○ 중견실무공무원(5급 및 4.5급) 정책토론회 - 장·차관 및 실무공무원 등 140명 ○ 환경정책 비전수립을 위한 국장급공무원 토론회 - 장·차관 및 소속기관장 및 국장급 공무원 참석	
18. 국민참여인터넷 주부 환경모니터링제 도입	'03.3.25	○ 쓰레기 관련정책 수립 및 종량제 개선대책 등에 주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반영 - 시스템 개발 - 모니터요원 모집(904명) - 모니터요원 확정 및 과제부여 - 시범운영('03.10~12)	
19. 주민참여 환경감시 프로그램 추진	'03.4.30	○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지역환경감시에 능동적·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 신고포상제도 운영	
20.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대화 및 협력의 장 마련	'03.11.13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구성 - 환경부차관, 경기도부지사, 팔당호주변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 대표 9인 총25인으로 구성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팔당호 수질정책을 협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협조아래 정책추진	
21. 환경정보 공개방 개설	'03.9.1	○ 실·국장이하 결재문서 인터넷 공개 - 업무추진현황 공개로 열린 행정구현	

제 목	일 자	내 용	비 고
22.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 - '03정보화수준평가에서 종합3위	'03.11	○ 시각장애인, 색약자, 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듣기 기능 - 색약자를 위한 색깔보기 기능 - 노약자를 위한 돋보기 기능 등 누구나 쉽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	
	'03.12	○ 환경정책 고객관리시스템 구현 - 환경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52,000명에 대한 환경정책고객 DB구축	
	'03.10	○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공개시스템 마련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평가 업무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개 - 공개실적 : 1,002건(본부 44건, 지방관서 958건)	
	'03.10	○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 외부 위험요소(천재지변, 사이버테러등)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고 중단없는 고객서비스 제공 ※ '03정보화수준평가에서 최우수점수(100점) 획득	
	'03.11	○ 지식정보공유 활성화 추진 -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개인 보유지식을 공유 - 지식정보 공유 건수 : 총3,200여건 ※ '03정보화수준평가에서 최우수점수(100점) 획득	